

사회

말썽난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소각장

‘주민 설명회’ 진실 공방

주민들 “외지 사람들 불러 놓고 설명회”

업체측 “정상적으로 3차례 열렸다”

광주시가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 허가과정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한 가운데 사전 주민설명회를 놓고 주민대책위원회와 업체 간 진실 공방이 일고 있다.

대책위는 주민설명회에 양과동 일대 주민들이 불참해 설명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업체는 정상적으로 설명회가 이뤄져 시설공사에 착수했다며 대립하고 있다.

20일 양과동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행조·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양과동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짓고 있는 A업체는 지난 200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총 3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모든 주민설명회가 양과동 일대 주민이 아닌 신원을 알 수 없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상 설명회를 실시

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행조 대책위원장은 “업체 측은 ‘지난 2009년 12월 수백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의 한 호텔에서 주민설명회를 포함 지난해 2월까지 총 3차례에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주민은 5명 정도에 불과했다”며 “주민이 없는 주민설명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설명회에는 업체에서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남성 수십 명이 앉아 있었다”며 “형식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업체도 잘못이지만 이를 인정해준 영산강유역환경청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청은 업체가 실시한 1차 주민설명회를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자 이후 2차례 더 설명회를 지시, 최종적으로 설명회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음독 강진군청 공무원 사망

郡, 사망자 판매한 청자축제 입장권 사용중지

티켓 취급 업소와 미찰일 듯

지난 19일 청자축제 입장권 판매대금 2억5000여만원의 예산 요구에 고민해오다 극악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광주일보 7월 20일 6면) 강진군청 공무원 최모(44·8급)씨가 같은날 밤 11시께 치료를 받고 있던 조선대병원에서 사망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축제기간(7월 30일~8월 7일) 중에만 쓰도록 돼 있

는 입장권 사용규정에 의해 숨진 최씨가 판매한 입장권은 사용증지기로 했다. 그러나 최씨로부터 입장권을 받아 소지하고 있는 업소 등이 현금 환불을 요구할 경우 군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군은 최씨가 받아간 2억5000만 원 상당의 입장권 대금 체권확보를 위해 최씨의 퇴직금 등에 대한 압류를 검토 중이다.

한편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중부취재본부=남철희 choul@

헤어진 애인 만났던 녹차밭 오려다…

필로폰 맞고 강원도~보성 운전 40대 구속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장거리 운전까지 한 40대가 붙잡혔다.

보성경찰은 20일 수시로 필로폰을 투약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이모(44·강원 춘천시)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모펜션 인근 팔각정에서 생수에 허석시킨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총 0.3g씩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집을 나간 애인을 찾았더니 그녀를 만났던 보성 차밭에 오려고 강원도에서부터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정신이 뚱뚱한 상태로 팔각정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필로폰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필로폰을 건네 지인의 소재 파악과 함께 판매책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회삿돈 120억원 빼돌린**선박블록업체 대표 입건**

전남지방경찰청은 20일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까지 탈루한 도중공업 대표 A(43)씨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년 공장 신축 공사와 관련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14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 자금 12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6년 선박블록 제조업체를 설립, 120억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 공장을 지은 뒤 신축 3개월 만에 215억원을 받고 해당 공장을 대기업에 매각해 95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챙기고 수익금 등 회사 자금도 120억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경찰특공대****‘특공대 캠프’ 학생들 함성**

20일 오후 ‘광주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체험캠프’에 참가한 중학생들이 훌륭한 함성을 지르고 있다. 총 39명이 참가한 이번 체험캠프는 오는 22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도의원 딸 가짜 경력 취직**전남문화산업진흥원에… 원장 자살로 드러나****“강력한 인사 청탁” 유서 사실로**

전남도 출연기관인 전남문화산업진흥원에 현직 도의원의 딸이 가짜 경력증명을 이용해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본인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채용 과정에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전남도가 공개채용 지원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허술한 인사 겸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전남도는 20일 도 산하 출연기관인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직원 A씨의 채용 과정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DJ센터)의 경력증명서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진흥원 직원이 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시 인사 기록을 토대로 당사자에게 먼저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DJ센터에 근무

한 적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도의원의 딸인 A씨는 진흥원 개원 당시인 지난 2008년 하반기 공채 절차를 밟아 입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DJ센터 경영분부 기획관리팀에 서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사무전문직(7급)으로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기소개서가 제출됐다. 해당 도의원은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을 감시, 견제하는 상임위원회인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이다.

이 경력증명서는 DJ센터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와 매우 흡사하지만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서류 오른쪽 상단에 찍은 발급용 도장 날인이 없는 데다, 사장 직인도 DJ센터의 것과 다르고 발급 담당자 직원 도장도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김 전 원장의 미니홈피 글에는 “2008년 개원하고 얼마 안 지나 강력하게 인사청탁이 들어왔으며 외지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압박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2011년 7월 21일 목요일

광주일보

취업 알선 1500만원 쟁기

광주 일간지 기자 구속

광주지방경찰청은 20일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금품을 쟁기 혐의(알선수재)로 광주지역 모 일간지 기자 A(4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B(45)씨에게 자신이 출입하는 구청의 구청장을 잘 안다면서 B씨의 딸(24)이 구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 착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의 딸은 A씨의 말을 듣고 다닌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1000만 원을 B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011년 7월 21일 목요일

광주일보

2011